

근대 일본 여성참정권 운동과 정당정치, 1924~1932

이치카와 후사에와 ‘부선희득동맹’의 운동 전략 및
그 변화를 중심으로 * **

이은경

1. 머리말

근대 일본에서 여성들이 국가를 향해서, 혹은 남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20년대 중반부터 패전 당시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부선’(婦選)

이은경(李垠庚)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HK).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일본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일본 근현대사 중에서도 여성의 운동과 생활, 일본 그리스도교의 역사, 그리고 현대 일본 사회의 기원으로서의 근대 문화의 형성 등이다. 최근에는 현대 일본 여성의 보수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저로는 『일본사의 변혁기를 본다』, 『젠더와 일본사회』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현대 일본의 ‘애국여성’과 ‘반위안부’ 활동」, 「근대 일본 여자교육에 대한 비판과 도전: 쓰다 우메코(津田梅子: 1864~1929)와 그의 학교」, 「근대 일본 공원표지의 탄생: 도쿄 다마영원의 이념·활용·변질」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20560)

** 이 연구는 일본사학회 월례 학술발표회(한성대학교, 2019. 6.), 제62회 전국역사학대회 한국여성사학회 분과발표회(고려대학교, 2019. 10.), 제4회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패널(타이완대학, 2019. 11.)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거쳐 완성되었다.

<https://doi.org/10.29154/ILBI.2020.22.232>

운동,¹ 즉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성공적이었고 평가할 수는 없다. 1924년 12월 ‘부인참정권획득기성동맹회’(부선획득동맹, 이하 동맹)² 설립을 계기로 본격화했지만, 실제 일본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1946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 혹은 일본의 남성들에 의해서도 아닌,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고 점령 통치를 시행하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에 의해서였다는 점을 떠올리면,³ 약 20년에 걸친 부선운동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로 말미암은 유산이 어떤 식으로든 전후 일본의 여성에게 혹은 현대 일본의 여성에게까지도 영향을 남기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선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부선운동에 관한 연구가 사실상 공백에 가깝지만,⁴ 그에 대한 연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줄곧 부선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부선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된 이치카와 후사예(市川房枝)에 대한 목격한 두 권의 연구서가 출판되었고,⁵ 이들 모두 후사예를

- 1 근대 일본에서 여성참정권은 ‘부선’(婦選)으로 곧잘 약칭되었는데, 이는 1925년 보통선거(남자) 실시가 의회를 통과하자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이 ‘普選’(보선)과 ‘婦選’(부선) 모두 발음이 ‘후센’인 것에 착안하여, “‘후센’(婦選) 없이 ‘후센’(普選) 없다”라는 구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한다. 여성참정권 혹은 부선은 지방정치 참가의 권리 및 선거권·피선거권인 ‘공민권’, 정당 결사와 가입의 권리인 ‘결사권’, 국정 참가의 권리 및 중의원 선거·피선거권인 ‘참정권’의 세 가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선 3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 ‘참정권’이라 할 때에는 ‘부선 3권’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경우와, 부선 3권 중 세 번째 권리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30년경에도 각 용어의 의미를 여전히 혼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며, 운동가 자신들도 설명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공민권’이 쟁점이 되었을 때에도 이를 포괄하는 ‘참정권’, 혹은 ‘부선’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이 글에서는 의미를 특기(特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선 3권을 포괄하거나 대표하는 의미로 참정권을 사용한다.
- 2 1925년 2월 의회에서 ‘보선’(普選) 즉 보통선거(남자) 실시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부인참정권획득기성동맹회는 ‘부선획득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3 이치카와 후사예는 훗날, GHQ의 결정에 앞서 패전 직후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내각 각의(閣議)에서 이미 여성참정권 부여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결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회고한다(歴史評論編集部, 『近代日本女性史への証言』, ドメス出版, 1979, 75~76쪽).
- 4 국내에서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이은경의 「모성 참정권 전쟁 그리고 국가: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비교문화연구』 43,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6.)이 거의 유일하나, 이 또한 구체적인 사료의 검토에 이르지 못한 채 매우 개략적인 소개에 그친다.
- 5 이치카와 후사예 및 부선운동 연구의 선구가 鹿野政直, 「婦選獲得同盟の成立と展開:『満州事変』勃発まで」(『日本歴史』 319, 1974. 11.)였다면, 근래에는 아래와 같은 목격한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 菅原和子, 『市川房枝と婦人参政権獲得運動: 模索と葛藤の政治史』, 世織書房, 2002;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亜戦争: フェミニズムは戦争をどう生きたか』, 法政大学出版局, 2015; 『闘うフェミニスト

중심으로 하는 부선운동의 실상을 상당히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후사예의 행적을 지나치게 소소하게 열거·기술하느라 후사예와 부선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고, 둘째로, 관련 인물들의 부선운동을 위한 행적을 일찍부터 ‘전쟁협력’으로 이어지는 전조(前兆)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부선운동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 전쟁협력의 원인 규명 그 자체에도 방해가 되는 듯하다.

셸던 개론(Sheldon Garon)의 경우, 부선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성에게 사회적 역할을 맡겨 동원하려는 지배층(정당, 관료 등)과, 참정권 획득을 비롯한 통치체제 편입을 원하는 여성 단체들 사이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연속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⁶ 여성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한 양자의 공감각이 있었으며, 여성참정권 부여를 위한 의회에서의 시도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여성의 협력도 전시와 평시를 관통하는 위와 같은 양자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연구와 비교할 때, 이 글은 일본에서 축적된 최근의 연구성과를 참고하고 여성운동과 정치의 관계에 관해서는 셸던 개론과 유사한 관점을 취하지만, 개괄적인 그의 연구에 비해 이치카와 후사예와 동맹의 부선운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다는 점, 그리고 —다소 의도적으로—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도 뚜렷한 차이는 아래의 두 가지다. 첫째, 근대 일본에서의 부선운동이 처해 있던 환경과 조건, 달리 표현하면 근대 일본 여성 참정권운동을 둘러싼 구조와 그 변화에 관심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부선운동이 영미를 비롯한 서구의 사례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했고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기반하여 전략이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후 일본의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市川房枝, 岩波書店, 2018.

6 Sheldon Garon, “Integrating Women into Public Life: Women’s Groups and the State,” *Molding Japanese Minds: The State in Everyday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부선운동의 대응전략이 변화할 때에도 이처럼 특수한 조건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변화의 방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둘째, 근대 일본 부선운동은 당시의 정치가를 대상으로 입법을 요구하는 일종의 ‘로비’ 활동에 가까웠던 만큼, 바로 그러한 활동의 상대(counterpart)가 되었던 ‘정치체제’의 변화에 주목하여 부선운동의 전략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약 20여 년의 부선운동 기간 동안,⁷ 일본의 정계는 정당내각, 거국일치내각, 초연(超然)내각과 같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거쳐, 결국은 사실상 군부와 파시즘이 주도권을 쥔 총동원체제, 대정익찬(大正翼贊)체제로 이어졌다. 후술하겠지만, 1924년 본격적으로 후사에 등이 부선운동을 시작할 무렵의 정계는 정우회(政友會)와 민정당이 두 축이 된 정당정치 혹은 정당내각의 시대였고, 부선운동이란 주로 정당과 의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다.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단 20년 동안 정치 체제와 그 주도세력이 빈번하게 변화했고, 부선운동계 역시 그에 맞추어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따라서 이른바 후사예를 비롯한 부선운동가들의 ‘전쟁협력’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부선운동의 역사를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구분할 것이라는 점도 밝혀둔다. 동맹과 후사에의 부선활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할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1924년 동맹의 발족부터 1940년 동맹 해산(후사에 개인을 중심으로 고찰할 경우에는 1945년 패전)까지의 기간을 각각 19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과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을 기준으로 삼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는 전쟁과 무관한 의회운동인 부선운동의 역사를 ‘전쟁’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만주사변 발발 이전을 ‘평시’, 만주사변 발발부터 중일전쟁 발발 전까지를 ‘준(準)전시기’로, 중일전쟁 발발 이후 패전까지를 ‘전시기’로 구분하는 식이다.

이것은 그간의 부선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전쟁과의 관련성, 특히 이

7 동맹의 활동 기간으로 한정한다면 1924년부터 1940년까지 약 16년이 되지만, 이 글은 동맹 해산 후에도 여전히 부선 획득을 목표로 활동했던 후사에의 활동까지 시야에 넣고 있기에,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를 부선운동 기간으로 간주한다.

치카와 후사예의 ‘전쟁협력’에 주된 관심이 있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부선운동의 시기구분을 ‘전쟁’이 아니라, —대개 전쟁의 여파 때문이기는 했지만— 부선운동(혹은 그 운동가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본 정치 체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⁸ 즉 정당정치의 시대, 정당정치 와해의 시대, 총력전과 대정익찬체제의 시대라는 세 시기로 구분하려 하는데, 지면 관계상 이 글에서는 부선운동의 전사(前史) 및 일본 부선운동이 갖는 환경과 특징 등을 소개하는 데 이어,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정당정치의 시대만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전개에 대해 소개하면,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여성참정권 운동 시작의 경위를 간단히 정리한 후, 그것이 처해 있던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그 특징을 파악하려 한다. 무조건 서양의 경우와 다른 점만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나, 후사예 등이 운동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리고 실제 중요하게 작용했던 당시의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일본 부선운동이 놓인 상황과 조건에서 그들이 택한 활동의 기본전략과 특징을 파악한 후, 그러한 부선운동 전략이 1924~1932년 사이의 정당정치 기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별고(別稿)를 준비 중인데, 주로 정당정치를 전제로 수립된 부선운동의 기본전략이 군부가 대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시대에 대응하여 어떻게 수정되어 갔는지를 살피는 내용이 될 것이다.

8 부선운동의 시대구분으로서가 아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준전 시기’ 혹은 ‘전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 근대 일본 여성참정권 운동 개시의 경위와 환경

1) 근대 일본 여성참정권 운동 개시의 경위

근대 일본에서 남녀의 구분 없는 초등교육이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3년 만인 1871년 이미 의무화되었던 반면, 다음 단계인 여자의 중등교육은 남자에 비해 한참 늦은 19세기 말에야 본격화했다. 여자 중등교육 실시의 목적은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에 필요한 ‘양처현모’를 양성하려는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여학교에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난 여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문제제기하기 시작했다. 1911년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등 여성들이 직접 만든 잡지 『세이토』(靑鞆)는 근대 일본 여성의 자각을 알리는 상징적 결과물이었고, 이후 라이초와 저명 문학가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를 중심으로 다수의 논객이 참가한 모성보호논쟁(1918~1919), 즉 ‘모성’(의 보호)과 (경제적) ‘자립’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한 라이초가 본래 자신이 집착했던 ‘모성’뿐 아니라 ‘여권’까지도 함께 추구하는, 즉 “일본 최초로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위한 시민적 여성운동단체”⁹⁾인 신부인협회(이하, 협회)를 조직한 것은 1919년 말의 일이었다고, 그를 도와 협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 이치카와 후사오와 오쿠 무메오(奥むめお)였다. 그들은 여성의 정치 집회 참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대(對)의회운동을 벌이지만, 1921년 중반 라이초와 후사오가 잇달아 협회를 이탈할 때까지 끝내 의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무메오와 더불어 운동을 계승한 후배들이 1922년 3월 여성의 정치집회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치안경찰법 개정’이라는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내분으로 동력을 잃은 상태였고 라이초로부터의 해산 요청도 있었기에, 1922년 말 협회는 자진 해산의 길을 택했다.

9 『岩波女性学事典』, 岩波書店, 2002.

이후 여성계는 이합집산을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다음 목표가 여성의 본격적인 참정권 획득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미 협회 활동 막바지부터, 집회의 참가나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설령 여성이 참정권을 요구한다 해도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었다.¹⁰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이미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관한 지식 및 정보가 일본에도 수입·보급된 영향이 컸다. 이름뿐이긴 했지만 1921년 7월 일본그리스도교부인교풍회(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 이하, 교풍회) 산하에 이미 ‘일본부인참정권협회’(이하, 참정권협회)가 결성되었고, 1923년 2월에는 참정권을 위한 여성들의 대동단결을 주창하며 ‘부인참정동맹’(이하, 참정동맹)도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한 여성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1923년 9월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 발발 당시, 정부 요청에 따라 여러 여성단체들이 연유 배달 등 구호사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재해로 인한 위급 상황에서 당국의 요청으로 여러 단체의 여성들이 모였고, 이때 시작된 구호사업은 1923년 9월 28일 흩어져 있던 여성단체들을 대동단결시킨 도쿄연합부인회(이하, 도련부회) 결성으로 이어졌다.¹¹ 그리고 이는 다시 한 번 참정권을 위한 여성 연대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간토대진재 후의] 부인의 활동이 구호로부터 부흥으로 옮겨 가자 ‘소실 유곽의 재흥을 허용할 수 없다’라든가 ‘소학교의 재흥 운운’한다든가, 자연히 여자의 입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한 표가 없는 것이 이를 방해한다. 참정권의 필요가 절실하게 통감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한편으로 제50의회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남자 보선이 통과될 것이라는

10 이은경, 「다이쇼기 일본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노선 갈등: 『여성동맹』을 통해 보는 신부인협회(1919~1922)의 역사와 의의」, 『동양사학연구』 116, 동양사학회, 2011. 9., 309쪽.

11 참여한 단체의 수는 40여 개를 넘어섰고, 내부적으로는 직업부, 제작부, 노무부, 사회사업부, 연구부, 교육부 등으로 편성되었다. 守屋東, 「帝都の復興と東京聯合婦人会」, 『婦人新報』, 1923. 11., 33쪽.

전망이 컸다. 그렇기에 ‘지금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매우 절박한 기운이 각자의 가슴을 뛰게 했다.¹²

재해 후 복구과정에서 새삼 참정권의 필요를 절감한 여성들 사이에 대(對)의회운동을 위해 힘을 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것이 1924년 12월 ‘부인참정권획득기성동맹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전 협회에서 의회운동을 벌이던 당시, “[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오라”던 의원들의 주문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¹³ 새로운 조직에 참가하는 단위를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정함으로써, 기존의 참정동맹과 참정권협회 회원까지 개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종래 손잡기를 꺼리던 두 여성참정권 관련 단체뿐 아니라 여성참정권 획득을 원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동맹을 통해 ‘대동단결’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그리고 남자 보통선거가 의회를 통과한 직후인 1925년 4월에는 “부선 없이 보선 없다”(婦選なくして普選なし)는 뜻을 담아 부선획득동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총무이사인 구부시로 오치미(久布白落実)를 비롯하여 회무이사 이치카와 후사에, 회계이사 나카자와 미요(中沢美代)의 체제를 갖추고, 중앙위원으로 가네코 시게리(金子しげり), 가와사키 나쓰(河崎なつ), 간토렛도 쓰네코(ガントレッド恒子) 등이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들의 직책이나 구성은 종종 변해 가고, 심지어 1930년에는 총무이사 오치미조차 동맹을 떠나 참정권협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후 줄곧 적극적으로 부선운동을 전개하면서 동맹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대 일본에서 부선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된 사람은 후사에였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사에의 주장과 활동이 동맹을 비롯한 부선운동계의 주장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논지를 전개하려 하는데, 이는 바로 부선운동에서 후사에가 실제 수행

12 大内光枝・和多寿也, 「普選今昔物語: 金子女子に聞く」, 『婦選』 8-11, 1934. 11.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亜戦争』, 71쪽에서 재인용).

13 「獲得の一本槍」, 『婦選』 1-6, 1927. 7. 괄호 안은 인용자.

14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亜戦争』, 72쪽.

했던 역할의 중요성 및 그로 인한 역사적 상징성 때문이다.

2) 근대 일본 여성참정권 운동의 환경과 조건

서양 열강이 나아간 길을 따라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이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수용하고 모방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 관련 정책, 특히 여성의 참정권에 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미 일본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영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참정권이 주어진 1920년대 중반, 정치단체에 가입할 권리조차 없었던 일본 여성에게 참정권은 요원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탈아입구’를 내걸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면서도, 여성과 관련해서만큼은 세계 5대 열강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어긋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부선운동이 출발했던 것이며, 동맹의 여성들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부선운동 출발 당시 이를 둘러싸고 있던, 혹은 부선운동이 놓여 있던 국내외의 환경은 이후 부선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화를 모색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세계 여성참정권 운동사에서 일본의 부선운동이 갖는 시기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부선운동 전개 당시 목표로 삼거나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이 시기적으로나 접근성의 면에서나 비교적 ‘가깝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총력전 당시의 공헌을 인정받아 오랜 숙원이었던 참정권을 부여받게 된 영국과 미국 여성의 사례는, 일본의 부선운동가들에게 참정권 획득에 대한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의 대상이 되었다.¹⁵ 동맹의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사례였는데, 이는 후사예의 경험과 관련이 깊다.

15 『부선』에는 「英国婦人と参政権」、「英国の婦選」、「海外婦選ニュース」、「英国の男女平等参政権」、「米国婦人は婦選を如何に行使しつつあるか」 등, 영미 부선의 사례를 소개하는 글들이 꾸준히 소개되었다.

후사에게 1921년 협회를 떠나 도미했을 때, 마침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참정권 획득에 성공하여 유권자로서 혹은 정당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던 참이었다. 후사에는 미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주역들을 직접 만나거나 관련 기관과 행사 등을 방문, 귀국 후의 활동을 위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꼭 부선운동을 하세요. 노동운동은 남자 손에 맡겨 두면 됩니다. 부인의 일은 부인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됩니다.”¹⁶라는 미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주역 앨리스 폴(Alice Paul)의 조언은, 자신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후사에 스스로 회고할 정도였다.¹⁷ 바로 그러한 후사에게 일본으로 귀국한 것은 여성계가 협력을 모색하던 1924년 1월의 일이었으니, 이후 동맹의 조직과 활동에서 그가 가져온 최신 정보가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서양 사례에 관심을 가진 것은 후사에만이 아니었다. 교풍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양의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총무이사 오치미 역시, 아래와 같이 참정권과 관련하여 서양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 중 이미 29국이나 부인의 참정권을 인정해서 남녀 평등하게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지우며, 특히 영국조차 최근 남녀 연령의 차이를 철폐한 지금 ... 일본에서는 부인의 참정권은커녕, 그 생존권조차도 거부하는 듯한 인권 무시와 질곡이 쇼와(昭和) 시대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이처럼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세계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일 수 없습니다.¹⁸

16 市川房枝, 「アリス・ポール女史の印象」(『婦選』 4-8, 1930. 9.), 『市川房枝集』 2, 日本図書センター, 130쪽.

17 후사에는 미국 체류 당시 '시카고 부인클럽'에 가입하여 여성들이 선거나 정치를 다루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참정권 획득 달성 후 정치교육을 목적으로 결성된 '부인유권자동맹'(National League of Women Voters) 본부를 방문, 이미 부선운동 '후'의 운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여성단체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세네카 폴즈에서 열리는 미국 남녀평등대회(Equal Rights Convention) 제75주년 기념대회에도 참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市川房枝, 『市川房枝自伝』, 新宿書房, 1984, 103쪽, 118~120쪽.).

18 久布白落実, 「望月内相に呈す」, 『婦選』 2-9, 1928. 11. 팔호 안은 인용자.

이처럼 근대 일본의 부선운동가들은 서양에서의 성공 사례를 일본 부선운동의 동기이자 명분으로 삼았다. 영미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실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언제까지라도 참을성 있게 남자에게 요구하는 운동을 장려한다. ... 1914년 드디어 세계대전의 선전포고가 내려지자 그때까지 폭동을 계속하고 있던 부인들도, 기타 각 부인단체도 일제히 참정권 운운하던 입을 닫고, 모두 함께 국가 위기에 직면하여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여자는 군대에 입대하여 땅으로 바다로 하늘로, 전선의 배후에서 남자를 도와 이를 보완했던 것이다. ... 지금 영국은 부인의 힘이 없었으면 전쟁을 그 긴 시간 동안 지속하는 것이 크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전쟁이 끝나자 관대한 남자들은 이미 부인에게 참정권을 주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 비로소 부인에게 오랜 기간의 운동과 전쟁에서 과시한 힘에 의해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졌고 ...¹⁹

이 글은 부선운동이 본격화한 후의 기사이기는 하지만, 이상과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일본의 부선운동가들은, 전례가 없는 여성참정권 획득이라는 목표를 향해 기약 없는 싸움을 벌여야 했던 영미의 여성들과 달리, 여성참정권의 실현이 결국은 시간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다.²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부선운동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달성 이후의 상황까지를 ‘예지’(予知)하여 대응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했던 것이다.

19 デームイ・デイス・リットルトン, 「市民としての英国婦人」, 『婦選』 3-12, 1929. 12.

20 흥미로운 점은, 서양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던 사실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부선운동가들뿐 아니라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다. 1918년 8월 내무성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양 여성의 역할과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suffragist groups)의 동향에 관한 242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Sheldon Garon, "Integrating Women into Public Life: Women's Groups and the State," p. 126).

둘째는 부선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일본 정치의 특수성으로, 부선운동의 시작부터 최고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근대 일본 정치사상 가장 민주주의적 시도라 할 수 있는 정당정치(정당내각)와 남자 보통선거 실시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중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 바로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활발한 부선활동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우회는 일본 최초의 그리고 근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으로, 1900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만들어져 ‘반(反)정당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²¹ 보수 색채가 강한 정당으로 평가된다. 한동안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우회에 대항하여 명멸했지만, 1927년 정우회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의 성립은 민정당이 등장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민정당은 반(反)정우회라는 기치 아래 여러 정치세력이 연합하여 결성된 것으로, 보수적인 정우회에 대항하여 ‘의회중심 정치’를 표방하는 등²² 각종 사안을 둘러싸고 줄곧 정우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동맹의 여성들은 주로 이들 양대 정당세력을 상대해야 했다.

동맹이 발족한 직후인 1925년 2월 제50의회에서 보통선거 실시가 결정되었고(남자에 한정, 실시는 1928년), 1927년부터 정우회와 민정당에 의한 양당체제가 본격화했다. 한동안 정우회와 민정당이 번갈아 내각을 조직하고 집권하는 정당내각의 시대가 이어졌고,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바로 이들 양대 정당의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안의 의회 제출을 촉구하고, 제출된 법안을 지지해 줄 부선 우호세력을 만들어야 했다. 치안유지법 등으로 언론과 사상이 통제되는 근대 일본에서, 가정을 지켜야 할 — 것이 당연시되는 —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 부선운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후원금을 모아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선운동을 어렵게 한 것은, 운동을 전개해야 할 상대

21 井上寿一, 『政友会と民政党』, 中公新書, 2012, 4~5쪽.

22 井上寿一, 『政友会と民政党』, 35~37쪽.

가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마저 불안정하다는 점이 었다. 부선운동이 마주해야 했던 당시의 정치체제란, 처음에는 정·민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내각이었지만 1927년부터 1932년까지의 약 6년 동안 정우회-민정당-정우회로 약 2년마다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후사에 등은 부선에 대한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혹은 새로운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부선을 더 지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동요했다.

심지어는 불안하게나마 부선운동의 상대가 되어 주었던 정당정치의 시대가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다. 1932년 5·15사건 이후로는 정당내각이 아니라, 군인이나 관료를 수상으로 하여 정당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로 조각되는 거국일치내각이나, 아예 정당과는 무관한 초연내각의 시대가 이어졌다. 정·민 양당은 여전히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강한 군부의 압력 속에 더 이상 의회에서 부선에 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1937년 7월의 중일전쟁 발발 이후로는 이른바 총동원체제로, 1940년에는 모든 정당들이 해산하고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에 합류하는 이른바 대정익찬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약 2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정세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했기에, 부선운동도 살아남기 위해 전략의 수정과 적응이 필요했다. 서양에서는 이른바 최초의 총력전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협력한 대가로 여성참정권이 주어졌지만, 일본에서도 총력전에 협조한다면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것인가? 다소 거친 가설이기는 하지만, 정당 대신 군부가 주도하는 총력전체제와 대정익찬체제하에서 종래의 의회 입법과 대중 계몽이라는 전형적인 부선운동을 중단한 채 정부와 군부의 요구에 따라 각종 ‘총후’(銃後)의 수호활동에 참여했던 후사에 등 부선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부선운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후방에서 남성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 것이 결국 최고의 여성참정권 운동이 되었던 영미에서의 전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근대 일본 여성들을 둘러싼 생활문화에서의 특수성으로, 부선운

동 시기가 마침 근대 일본에서 생활의 근대화 혹은 합리화의 시점과 중첩된다는 점이다. 일본이 개항과 메이지유신 등을 거쳐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도시의 건설뿐 아니라 서양의 생활문화 전반을 수용하여 모방하려 했던 사실은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활에 관한 관심은 19세기 후반 근대화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1920~1930년대에도 여전히 ‘생활개선’, 혹은 ‘생활합리화’라는 명목하에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²³ 주부를 비롯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계몽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세기 초부터 『부인지우』(婦人之友)와 같은 잡지가 발행되었고, 그 결과를 실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활개선박람회 등도 당국의 협력 속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 1923년 간토대진재 이후에는 면적의 절반 이상이 불탄 도쿄라는 공간을 새롭게 구획하고 재건해야 하는 등, 가정의 수준을 넘어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의 도시 계획이나 행정의 일부로서도 생활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²⁴

근대 일본에서 ‘생활’은 그 자체가 여성과 공적 기관이 연결될 수 있는 현안이었다. 주부들이 자신이 책임진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개선에 매달릴 때, — 간토대진재 이후 도쿄의 사례에서 보듯 — 지방정부는 도시의 구획과 유통, 환경 등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신했다. 여성들이 소비자로서 생활의 문제에 착목할 때, 이를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지자체와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가장 중심의 가정을 단위로 삼아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국가를 건설하고, 나아가 부국강병과 효율적으로 전시에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가정과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23 小関孝子, 『生活合理化と家庭の近代』, 勁草書房, 2015.

24 이은경, 「근대 일본 여성과 제도부흥」, 『일본학보』 96, 한국일본학회, 2013. 8.

이러한 배경에서 ‘생활’ 문제는 여성들의 사적인 바람과, 정부와 권력의 공적인 욕구가 큰 저항 없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되었다. 정치와 행정 혹은 전쟁 수행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개 생활과 관련된 것이었고, 참정권을 얻어내기 위해 줄곧 정치인과 관료들의 기색을 살피야 했던 여성계로서는 평소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했던 생활과 관련된 노력을 요구받을 때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생활 관련 요구란 대개 여성 자신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었거나, 설령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더라도 최소한 국가와 정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정당정치 시대 여성참정권 운동의 전략

1) 부선운동 초기의 전략과 특징

이상과 같은 근대 일본의 상황과 조건에서 후사예와 동맹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선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을 전개했을까? 필자는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6개로 제시하고자 한다.²⁵

첫째, 불법 혹은 폭력적인 방법의 사용을 배제하고 철저히 준법에 의거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관했다. 즉 국가나 정부와 ‘대결’하여 목적하는 바를 쟁취하겠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국가 안에서의 ‘합법성’에 줄곧 연연했던 것이다.²⁶ 정당정치 시대에 부선 획득을 위한 격렬한 시위가 없었던 것은 물론, 만주사변 발발 이후, 즉 군부와 파시즘이 대두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이른바 준전시기에도 부선운동가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

25 각각의 특징은 대부분 운동 초기인 정당내각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 이후 정세(政勢)와 전세(戰勢)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해 간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한 대부분 부선운동의 중추였던 후사예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26 国武雅子, 「戦時期の市川房枝」, 『歴史評論』 552号, 1996.

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만주사변 발발 후 오래지 않아 전쟁과 군부를 비판하는 후사예의 발언이 실린 동맹의 기관지 『부선』(1932년 3월호)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²⁷ 불법이나 폭력과는 관계가 없었고 무엇보다 부선과 관련된 활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후사예와 동맹의 운동가들은 영미에서의 여성참정권 운동에 대해 학습했고, 그로 인한 결과뿐 아니라 달성 후의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영국에서의 여성참정권 운동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폭력이 있었던 것 역시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부선을 위한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 때, 영미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직접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들의 ‘협력’이라는 점, 즉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후방에서 남자들을 적극 도왔기 때문이라는 점이 그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정보였을 것이다.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한 운동을 벌여야 했던 영미의 운동가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지만, 시작에 앞서 사실상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일본의 여성들은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해 굳이 불법적 혹은 폭력적인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실제 후사예는 영국에서 폭력적인 운동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과격한 방법이 일본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²⁸

둘째, 대(對)정당, 대(對)의회 입법운동을 활동의 중심으로 하되, 철저한 대(對)정당 중립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첫째로 제시한 ‘평화’ 원칙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후사예를 비롯한 동맹의 대표들이 부선을 호소하기 위해 양당의 정치인을 찾아가 면담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그 대상에는 사회당이나 일본농민당과 같은 소규모 무산정당까지도 포함되어 있

27 市川房枝, 「×と○との対話」(『婦選』 6-4, 1932. 4.), 『市川房枝集』 2, 367쪽.

28 「『選挙革新と婦人』座談会」, 『婦選』 4-2, 1930. 2. 1930년 민정당에 의해 제한공민권안이 제출되었을 때, 동맹 안에서도 여성참정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국의 여성들에 비해, 일본에서는 이를 위해 희생한 자가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小泉郁子, 「パターナリズムを排す」, 『婦選』 4-8, 1930. 9.). 그러나 실제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일은 없었다.

었다.²⁹ 이들의 주된 활동은 의원들을 만나 부선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동맹의 활동이 너무나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의 정기 의회 기간을 제외하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³⁰ 하지만 의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출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뿐 아니라, 제출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개원(開院) 이전에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선거 기간에는 부선에 호의적인 혹은 부선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거나 그들을 위한 유세를 전개함으로써, 정계에 부선 지지세력을 확대하려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모든 정당과 거리를 유지하는 중립을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동맹 발족 당시부터 “부인참정권 획득을 위해, 의회에 대한 직접운동과 일반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운동을 전개”³¹할 것을 ‘목표’로 삼았고, “정당·정파에 대해 절대 중립의 입장을 유지할”³² 것을 ‘규약’에 담았던 것이다. 정당과는 교섭할 뿐 특정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후사에도 거듭 강조했던 바이며,³³ 동맹은 “주로 정당을 상대로 하고, 그 당략(党略)으로서 하루 빨리 부선이 이용되도록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당이 부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³⁴ 다만 이것이 정당에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부선을 달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1928년(1차), 1930년(2차), 1932년(3차) 보통선거로 치러지는 중의원 총

29 市川房枝, 「選挙と政党と婦人」(『婦選』2-2, 1928. 2.), 『市川房枝集』2, 370~375쪽.

30 塩原静, 「政治季節を前にして」, 『婦選』2-9, 1928. 11.

31 「婦人参政權獲得既成同盟會創立總會案内状」(1924. 12. 6.), 市川房枝 編集・解説,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政治』, ドメス出版, 1977, 236쪽.

32 「婦人参政權獲得既成同盟會宣言書・規約等」(1924. 12. 13.), 市川房枝 編集・解説,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政治』, 238쪽.

33 市川房枝, 「婦選獲得同盟の対政党政策」(『婦選』1-3, 1927. 3.), 『市川房枝集』1, 351쪽.

34 「婦選と政党」, 『婦選』1-5, 1927. 6.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더하면 사실상 거의 매년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동맹은 정당에 대한 엄정중립 원칙과 부선 지지세력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임했다. 동맹은 소속 정당이나 여타의 정책과 무관하게 오로지 후보의 ‘부선’에 대한 태도 혹은 여성으로서의 입장을 기준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하여 리스트를 공개하고, 멀리 지방까지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서곤 했다. 이러한 초당파적 전략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혹은 부선에 유익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의견이 엇갈려, 히라쓰카 라이초·오쿠 무메오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³⁵

셋째, 의회와 대중을 향해 여성참정권 인정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남녀평등 등의 보편적 가치보다 부선 실현에 따른 이익을 강조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물론 여성참정권 주장이 남녀평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동맹 설립 당시부터 천명하였던 바이지만, “우리 여성은 이미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³⁶라고 한 것은, 여성참정권의 당연함을 표하기 위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후사에는 아직도 부선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여성을 향해, “부인의 생활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또 부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³⁷를 자각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가 사용한 “부선은 열쇠다”라는 표어는 부선이 더 나은 단계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한 열쇠에 해당한다는, 즉 부선 달성을 통해 산적한 각종 ‘부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말이었다.³⁸ 후사에 스스로도 여성참정권이 “구미에서는 부인의 인간의 권리로서의 요

35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亜戦争』, 87쪽.

36 「婦選獲得同盟宣言・規約」(1925. 4. 19.), 市川房枝 編集・解説,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政治』, ドメス出版, 1977, 254쪽.

37 市川房枝, 「地方支部の任務」(『婦選』 1-8, 1927. 9.), 『市川房枝集』 1, 361쪽.

38 「なぜ女教員にも婦選が必要か」, 『婦選』 2-10, 1928. 12.

구”인 데 비해, “일본에서 참정권은 오히려 수단”으로서, “오늘날 현존하는 봉건적 법률제도 및 기타 부인 및 아이에게 불리한 법률제도를 수정·폐지”하기 위해 주장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³⁹

그러나 부선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설득해야 할 대상은, 자각하지 못한 다수의 여성이 아니라 여성참정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남성 정치가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대중이었다. 남자만으로 이루어진 정당과 의회의 정치인과 대중에게 여성참정권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가 동원되어야 했다.

남자만으로 일가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국가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가 공동으로 하는 힘, 즉 공동의 책임을 짐으로써 국가가 성립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권리도 공동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⁴⁰

얼핏 보면 남녀평등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묘하게 다르다. 가정이나 국가가 남녀 공동의 힘에 의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니 그러한 ‘필요’로부터 여성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책임과 표리를 이루는 권리(참정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일본의 국민을 낳아 키우는 ‘현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즉 우수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여성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시오카 야요이(吉岡彌生)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부인이 이러한 남자의 지배에 있으면 결국 함께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일본인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부인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인은 단지 부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다음으로는 국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한 부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애로운 어머니(慈母)는 될 수 있어도 현명

39 市川房枝, 「現代の婦人問題」(『大思想エンサイクロペヂア21』, 思想問題編, 春秋社, 1930. 6. 24.), 『市川房枝集』2, 107~108쪽.

40 山川房子, 「なぜ婦選がほしいか? 人らしい生活を希望す」, 『婦選』1-3, 1927. 3.

한 어머니(賢母)는 될 수 없습니다. 현모에게 키워지지 못하는 아이가 열등한 국민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⁴¹

때로는 일본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여성의 협력 혹은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20년대 후반 민정당 정권하에서 경제 위기가 심각해졌을 때, 동맹의 기관지인 『부선』에는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 신속하게 부인공민권을 비롯한 모든 부인의 정치적 자유를 해방함으로써, 진정한 부인의 힘을 이용하여 이번 국난 타개의 임무의 일단을 수행케 할 책임을 자각하라.”⁴²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고, 총무이사인 오치미는 하마구치 수상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여자에게, 그 책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부역의 경제가 얼마나 국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평소부터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우리는 권리로서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책임 범위의 확장으로서 요구하는 것이다.⁴³

이처럼 부선의 필요를 ‘실용’에서 찾는 논리의 언설은 정당정치 시대에 정당 정치인과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로서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의회 정치가 와해되는 준전시기나 전시기에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졌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군부와 파시즘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녀 평등과 같은 당위적 선언이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고, 정권에 혹은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 일본에서 가장 평화롭고 심지어 민주적이었던 정당정치 시대에조차 ‘실용’을 주된 근거로 부선의 필요성을 논해야 했던 사실은, 근대 일본 사회에서 여성에게 드리워진 규범과 굴레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얼마나

41 吉岡彌生, 「日本の現状を觀て: 婦選の必要を論ず」, 『婦選』 1-11, 1927, 12.

42 「政府はまず婦選を与うべし」, 『婦選』 3-11, 1929, 11.

43 久布白落実, 「濱口首相に呈す」.

내면화되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선운동의 일환으로서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을 중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여성들의 각종 선거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부선운동의 양대 축이 의회운동과 정치교육일 정도로 여성의 정치교육에 많은 공력을 기울인 것은 첫째,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참정권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를 각성시킬 필요가 있었고, 둘째, 당시 여성참정권을 반대하는 주된 입장인 이른바 ‘시기상조론’의 주요한 논거가 바로 여성들의 정치적 소양 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동맹은 남자교육과 마찬가지로 여학교 교육 과정 중에도 정치교육의 내용을 편성할 것과, 학교를 이미 벗어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도 정치교육을 포함한 공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꾸준히 주장했다.⁴⁴ 동맹의 운동가들 스스로도 여성의 정치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기적으로 연구회·간담회 등을 개최했고, 규슈(九州)와 홋카이도(北海道)를 포함해 전국 각지를 순회하는 정치 강연에 나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숙정, 즉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전개했고, 가족 등 주변 유권자를 향해 바른 한 표의 사용을 독려하는 계몽활동도 잊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은 물론 유권자 교육과 선거운동 참여 등이 아직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무권자’(無權者)를 상대로, 혹은 무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일본 부선운동의 환경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했던, 이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목도하고 그 역사를 파악한 후에 시작된 후발주자였던 것,⁴⁵ 그중에서도 후사예의 미국 체류 경험과 관련이 깊다. 1920년대 초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이 실현된 후의 상황을 앞서 목격한 후사예는 여성을 위한 정치 혹은 유권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여성이 정당에 입당할 경우의 손익이나 정당 내 역할과 같이 여성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도

44 久布白落実, 「政友会と婦選」, 『婦選』 2-6, 1928. 8.

45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亜戦争』, 79쪽. 후사예는 이미 「婦人参政権運動の婦人運動に於ける地位」(『婦人公論』 10-3, 1925. 3.)라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서양 각국에서의 여성참정권을 둘러싼 움직임과 그 역사를 심도 있게 소개할 정도였다.

일찍부터 고민하고 있었다.⁴⁶

다섯째, 부선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대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생활운동·사회운동을 병행했다. 이는 제2장 2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생활의 개선과 합리화가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이 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과거 협회 시절 대의회활동의 경험으로부터, 후사에는 정치인과 정당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쉽게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부선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건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1929년 가스비 인하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으로, 쓰레기 처리나 도매시장의 업자 선정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도시문제·사회문제·평화문제 등으로 시야를 확대했다.⁴⁷

제2장 1절에서도 살핀 것처럼, 설립 당시 동맹에서는 오로지 ‘부선’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대동단결하고, 다른 문제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 각자가 속한 다른 단체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바로 ‘부선’이라는 공통의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동맹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32년 5·15사건 이후 중앙 의회에서의 부선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소비자운동, 사회운동을 동맹의 주요 활동 항목으로 포함시켜 이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데, — 제3장 2절에서 살피게 될 것처럼 — 주로 정당과 의회를 대상으로 부선운동을 전개하던 정당정치 시대부터 이러한 운동 영역의 확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여섯째, 동맹은 설립 당시부터 참정권을 위한 여성의 ‘대동단결’을 주요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후로도 특히 후사에는 줄곧 여성의 연대와 협력

46 후사에는 미국 체류 당시부터 귀국 후까지 「婦人有權者連盟の会合を膨張して：米国婦人は参政權を如何に行使せんとして居るか」(1921. 12.), 「米国婦人有權者同盟の擧げている綱領」(1922. 1.), 「最近に於ける米国婦人運動の方向：参政權行使についての觀察」(1922. 2.), 「最近の米国婦人界」(1924. 7.~9.) 등의 문장을 통해, 미국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 이후의 역사를 꾸준히 전하고 있었다.

47 鹿野政直, 「婦選獲得同盟の成立と展開」.

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사에 등은 ‘부선을 위한 최대한 폭넓은 연대’를 추구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되었다. 하나는, 최대한 많은 여성과 단체가 ‘부선’을 목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다른 장벽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 앞의 내용을 뒤집은 것이기도 한데 — 여성계의 폭넓은 연대를 위해서는 모든 여성 보편의 바람이 될 수 있는 ‘부선’이야말로 최적의 이슈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는 부선이라는 목표가 계급이나 직업의 차이를 넘어 최대 다수의 지지를 얻기에 좋은 여성계의 공통된, 그리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었다.⁴⁸

당시 상황에서 여성들의 대동단결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25년 보통선거 실시가 결정되면서 다수의 무산정당이 잇달아 출현했고, 그들 대부분이 부선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주지하듯 그와 같은 해에 언론과 사상을 억압하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악법 중 하나인 치안유지법도 함께 탄생했다. 아무리 참정권이라는 제한된 목표만을 설정하더라도 치안유지법의 아래에서 사회주의 정당, 혹은 무산정당과의 연대 방침을 세우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⁴⁹ 정부나 권력기관으로부터의 곱지 않은 시선뿐 아니라 여성계 안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선운동의 주축이 대부분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은 부르주아이자 이른바 신중간층에 속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미에서 여성들의 분열이 참정권 실현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했던 후사에는 부선을 위한 여성의 대동단결, 혹은 여성의 대동단결을 위한 부선이라는 원칙을 부선운동 기간 내내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2) 정당정치 시대 부선운동과 잠재적 좌절

이제까지 근대 일본 여성참정권 운동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과 조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부선운동의 전략과 그 특징을 파악했다면, 이하에서는 시

48 市川房枝, 「婦人參政權運動の婦人運動に於ける地位」, 322쪽.

49 菅原和子, 『市川房枝と婦人參政權獲得運動』, 126쪽.

간 순서에 따라 운동이 전개되는 양상을 살피되, 동맹만이 아니라 그 상대가 되었던 정당과 정치인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다만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이 글에서는 주로 부선운동의 시작부터 달성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정당정치의 시대(1924~1932)에 한정하여 고찰할 것이다.⁵⁰

① 정당내각과 여성공민권 실현 가능성의 고조

동맹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920년대 중반은 1918년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의 성립 이래 이어져 온 정당정치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할 수 있는 시기로, 특히 1927년 중반 반(反)정우회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세력이 연합한 민정당이 창당되면서 정우회와 민정당에 의한 양당정치가 본격화했다. 이 시기 부선운동을 위한 주된 활동이란, 안으로는 줄곧 조직의 기반을 다지고 학습을 통해 내실을 강화하며, 밖으로는 정치인을 만나 입법을 설득하면서 부선의 필요성에 대해 여성과 대중을 계몽·교육하는 것이었다. 1927년에는 기관지 『부선』도 창간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부선에 대한 지지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져, 부선의 주장을 낯설어하던 정계와 대중의 반응도 조금씩 변해 갔다. 1927년 말에는 “부인참정권 주장도 일반적”⁵¹이 되었다고 당사자들이 느낄 정도였다. 호의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활발한 부선운동의 성과이든 여성참정권이 부여되기 시작한 국제적인 분위기의 영향이든, 당시의 일본 사회가 여성참정권 주장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여성의 결사권, 공민권, 참정권 부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선 3안(案)’은, 제50의회(1924. 12.~1925. 3.)에 최초로 제출된 이래 매년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제59의회(1930. 12.~1931. 3.)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제출되었다. 이는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부선을 지지하는 개별 의원들의

50 정당정치 시대는 앞서 다룬 부선운동의 전략이 처음 수립되었던 시기에 해당하기에, 일부 내용의 중복은 피할 수 없다.

51 市川房枝, 『創立三周年記念日を迎うるに祭して』(『婦選』 1~11, 1927. 12.), 『市川房枝集』 1, 365~366쪽.

협력을 얻어서 이루어졌는데, 특정 정당과 제휴하지 않고 오로지 부선을 위해 정치인을 이용한다는 동맹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1928년 중반부터 종래 부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정당’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나카 기이치 내각의 인기하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우회는 최초의 보통선거⁵²로 치러진 1928년 2월 20일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으로서는 패배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인 민정당보다 겨우 한 석 많은 박빙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에 이어 제2차 산둥(山東)출병, 장쥘린(張作霖) 폭사사건 등 이른바 ‘중국문제’의 미숙한 처리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정우회는 인기 만회를 위해 부선을, 구체적으로는 부선 3권 중에 ‘공민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동맹은 정우회의 전략적인 의도를 충분히 알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서 어쨌든 이(여성공민권 부여)를 내건 용기를 평가하며, 무사히 가능한 한 좋은 내용으로 제출될 것을 희망한다.”⁵³라고 부선 획득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공민권조차 상조”라는 야당인 민정당의 반대뿐 아니라⁵⁴ 부선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내상(內相) 모치즈키 게이스케(望月圭介)마저 ‘상조론’을 표명하면서, 결국 연말 정기의회(56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모치즈키 내상의 반대로 인한 좌절은 “신기하게도 올해의 부선운동을 통일하고 또 구체화”하는 효과가 있었다.⁵⁵ 부선이 처음으로 정당 정책으로 본격 거론되었던 것 자체가 부선운동의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그 실현을 현실감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했던 것이다.

중국에서의 잇단 실정, 특히 장쥘린 폭사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천황과의 갈등으로 다나카 수상이 1929년 7월 사임하자, 새로운 내각을 조각하라는 천황의 ‘대명’(大命)은 민정당의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에게 내려졌

52 지방선거까지를 포함하면, 1927년의 부현회(府県会) 선거가 최초의 보통선거가 되지만, 이 글에서 ‘보통선거’란 중의원 총선거를 기준으로 한다.

53 「婦選の國際的進出」, 『婦選』 2-5. 관호 안은 인용자.

54 이에 대해 동맹에서는 “정우회가 옳다고 하면 그르다고 하고, 정우회가 틀다고 하면 하양다고 하는 태도일 뿐”이라며 탄식했다(「婦選案の成行と民政党」, 『婦選』 2-7, 1928. 9.).

55 「婦人運動の一転回期」, 『東京朝日新聞』, 1929. 1. 27.(『婦選』 3-2, 1929. 2.에 재수록).

다.⁵⁶ 앞서 야당 시절 부선에 대해 상조론을 피력하긴 했던 민정당이지만, 본래 정우회보다 진보적으로 의회정치를 중시한다는 사실뿐 아니라,⁵⁷ 민정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장상(藏相)으로 대표되는 긴축정책이었던 만큼, 가정 경제를 책임진 여성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부선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마구치 내각이 8,000만 엔의 긴축정책을 표방했던 만큼 근검과 국산장려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여겼고, 이를 근거로 내각을 향해 부선을 요구하려 했던 것이다.

부인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 정부의 이 운동에 참가하게 하려면, 우선 부인으로 하여금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진정한 부인이 자각하여 서게 하려는 것이라면 우선 부인을 법률상으로 일개 국민으로서 승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⁵⁸

실제 내상이었던 아다치 겐조(安達謙藏)는 여성 대표단을 접견하여 근검 절약과 국산장려 등에 여성의 협조를 요청했고, “대전(大戰) 당시의 영국 부인과 같이, 부인이 이번에 크게 활약한다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에게 공민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⁵⁹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 당시의 남성 정치인들도 서양의 사례를 전제로 부선운동가들의 바람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민정당 내각에 대한 높은 기대와 달리, 동맹의 인사들은 경제 관

56 일반적으로 총리를 임명하는 절차는 천황이 내대신에게 다음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타진하고, 내대신은 이를 원로(元老)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와 상의하도록 청한다. 천황은 사이온지의 추천을 받아 낙점, ‘대명’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市川房枝, 「×とロとの対話」, 『婦選』 5-5, 1931. 5., 182쪽).

57 「新内閣と婦人」, 『婦選』 3-7, 1929. 7.

58 「消費節約と婦人」, 『婦選』 3-8.

59 市川房枝, 「全日本經濟大会の報告」(『婦選』 3-10, 1929. 10.), 『市川房枝集』 2, 37~42쪽. 전국간사이 부인연합회가 주최한 전일본경제대회에서의 축사 내용. 당일 부선에 대한 논의 요구는 “참정권 등은 대체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으로 지금 받아도 쓰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 부인이 크게 활약하면 조용히 있어도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다.”라는 반대에 부딪혀 유아무야 묻히고 말았다.

런 위원회에 초대받지 못했고, 부선은 민정당의 주요 10대 정강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정권 교체 후 처음 맞이한 1929년 말의 정기의회(57회)는 회기 중에 해산되었기에, 부선과 관련해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30년 2월 총선거(2차 보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내각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하자, 다시 한 번 부선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실제 선거 직후 열린 4월의 특별의회(58회)에는 부선 3권 중 공민권안(과 참정권안)이 상정되어, 양당 의원의 압도적인 표를 받아 사상 최초로 중의원을 통과하는 일이 있었다.⁶⁰ 비록 귀족원에서 심의 미료(審議未了)로 끝나 마지막 단계에서 부선 실현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일단 중의원에서 공민권안이 통과되었던 만큼, 다음 의회를 향한 전망과 목표가 명확해졌다. 연말에 있을 정기의회(59회) 전까지 귀족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혹은 그를 위한 여론의 조성만이 남은 것이었다. 여당인 민정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정우회조차 과거 다나카 내각 시절에 부선을 적극 고려했던 것을 떠올리면, 양당 모두 이렇게 부선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다음 의회에서 급세 바뀔 것이라 상상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② 선거의 참여와 부선운동의 확대

한편으로 동맹은 이상과 같은 대의회운동과 병행하여 선거운동 참여와 계몽운동, 심지어 대중운동을 통해 부선 지지층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었다. 다나카 내각하에서의 1928년 제1차 보선, 하마구치 내각하에서의 1930년 제2차 보선 당시 동맹의 여성들은 정작 자신은 참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심지어 유권자인 대부분의 남성들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의 참여는 평소 부선운동가들이 간담회나 강연의 형식으로 지속해 온 여성 정치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의 실천과 경험의 축적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60 이는 각각 〈市制中改定法律案〉, 〈町村制中改定法律案〉, 〈北海道会法中改定法律案〉으로, 조문 가운데 「帝国臣民タル年齢二十五年以上ノ男子」, 「年齢二十五以上ノ帝国臣民」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児玉勝子, 『婦人参政権運動小史』, ドメス出版, 1981, 190쪽).

1928년의 제1차 보선은 일본 사회뿐 아니라 동맹으로서도 설립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본격적인 선거였기에, 이를 향한 동맹의 각오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 임하면서 동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첫째, 각 정당 및 후보자를 향해 부선을 정강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부선을 정강에 포함하는 자에게 응원 연사 파견 및 추천장을 발송한다. 셋째, 유권자를 향해 기권, 매수, 기타 부정행위에 좌우되지 말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부인을 향해 제삼자로서 선거를 감시하고 [가족 등 주변의] 유권자들이 그 권리를 이상적으로 행사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⁶¹

그러나 이처럼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부선 지지 여부’를 가지고 후보를 판단하려는 동맹의 방침에 대해서는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없지 않았다.⁶² 도쿄대 교수였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가 정계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많음에도 “부선에 찬성이라고만 하면 상대가 도둑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은 “경악할 폭거”라고 후사에게 서한을 띄웠던 것을 보면,⁶³ 선거에 임하는 동맹의 자세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1930년 제2차 보선이 실시될 때의 상황은 — 특히 부선운동과 관련해서는 — 2년 전의 선거 때와 사뭇 달라졌기에, 동맹이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928년 정우회가 당 차원에서 여성공민권 부여를 진지하게 검토했었던 만큼, 이전처럼 의회 내에 부선 관련 법안을 제출해 줄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마구치가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자, 동맹은 다음과 같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응원보다는 선거 혁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61 「婦選獲得同盟の総選挙に対する声明書」(『婦選』2-2, 1928. 2.), 市川房枝 編集・解説,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政治』, 285쪽.

62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亞戦争』, 87쪽.

63 「市川房枝にあてた吉野作造の手紙」(1928. 2. 10.), 市川房枝 編集・解説,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政治』, 289쪽.

우리는 이번 총선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응원·추천의 방법을 버리고, 오로지 부인의 입장에서 선거 혁정의 운동에 전력을 기울여, 전국 부인을 동원해서 선거 혁정의 근간인 매수의 근절, 기권의 방지, 기타 교육운동에 임하려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제2차 보선의 달성에 협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부인의 정치적 의식을 높이고 이로써 부선 실현의 기운을 촉진하고자 한다.⁶⁴

어차피 부선운동가들이 선거에서 지원한 의원들의 힘으로 부선을 획득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정우회와 민정당 모두가 당의 지지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서 부선을 고려하기 시작한 이상, 선거에서 부선운동가들의 관심과 운동의 중심은 지지 의원 당선을 위한 지원보다는 이른바 선거숙정 혹은 선거의 정화로 옮겨졌다. ‘보통선거’가 막 도입된 직후였던 만큼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이해나 선거 경험이 없었고, 따라서 권력이나 금권에 의해 표의 향배가 좌우되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⁶⁵ 실제 그러한 선거를 통해 정계로 진입한 정치인들의 수준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⁶⁶

하지만 바로 것처럼 실망스러운 상황이야말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부패한 선거와 정치의 숙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성참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었고, 후사에 등은 실제 그러한 시도를 했다. 예를 들면 첫째,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져 유권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의 매수가 어려워지고, 둘째, 여성은 본래의 성격이나 그간의 선거를 지켜 본 경험으로 매수와 같은 악습에 좀처럼 빠지지 않으며,⁶⁷ 또한 여성의

64 「總選舉に對する聲明書」(兒玉勝子, 『婦人參政權運動小史』, 183쪽에서 재인용).

65 보통선거(남자) 도입 후의 혼란과 부패의 양태는, 역시 부선의 실시가 같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기상조론자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지만, 반대의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즉 어차피 보선의 실시 전에도 부선에 대해서와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실시 후에는 그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가 있다면 이는 여성의 정치 참가에 의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는 식의 논리였다. 보통선거의 실시 결과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66 예를 들어 1928년 말 도쿄사회는 정부(내상)에 의해 해산 당했는데, 최초의 보선에 의한 도쿄사회 선거에서의 오직(汚職)사건에 연루되어 전체 88명 중 1/3을 훌쩍 넘는 31명의 출석이 불가능해져,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兒玉勝子, 『婦人參政權運動小史』, 171~172쪽).

67 「婦選座談會」, 『婦選』 4-1, 1930. 1.

정치 참여가 의회에서의 폭력을 배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이었다.⁶⁸

동맹이 정치인과 대중에게 부선의 정당성을, 혹은 여성의 사회·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대중과 밀접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었다. 기억할 만한 시도로서는 1929년 봄 ‘가스요금 인하와 계량기 비용 회사 부담, 증자 반대’ 등을 내걸고 일종의 소비자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독점기업으로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도쿄가스회사가 계량기의 사용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심지어 시의회에 1억 엔의 증자 및 공로금 지급 등의 승인을 요구해 온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1929년 도쿄 시의회는 ‘가스요금 인하 및 계량기 사용료 철폐’ 건의안을 가결시켜 도쿄가스회사에 이를 요청했다. 독점회사인 도쿄가스회사는 요금 변경이나 증자 시 시의 승인을 얻어야 했는데, 시의회는 당시 석탄의 가격 인하나 제반 상황의 변화로 이익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 가스요금을 인하할 것, 가스계량기에 부과하던 별도의 사용료를 폐지할 것 등을 결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1억 엔의 증자와 250만 엔의 공로금 지출을 시에 요청하는,⁶⁹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동맹은 당연히 시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동맹에서는 “정치가 부역을 좌우하는 것이니 따라서 부인이 정치에 간여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 “가스문제는 그 의미상 그야말로 도쿄 부인·시민의 분기(奮起)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도쿄시에 협력했는데, “이러한 힘이 전체 시의 부인을 자각시켜, 그야말로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일보 진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바람직한 일”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⁷⁰ 동맹은 부인단체 가스문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가스비 인하 연합운동

68 실제 의회(59회)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고, 후사에는 “현재 일본의 의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폭력 공정의 상징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의회 폭력 근절을 부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市川房枝, 「亂議會と婦人參政權」(『婦選』 5-3, 1931. 3.), 『市川房枝集』 2, 155쪽.

69 児玉勝子, 『婦人參政權運動小史』, 178쪽.

70 「瓦斯値下げ問題と婦人」, 『婦選』 3-5, 1929. 5.

전개를 결의하면서 연설회, 전단 살포, 회사 앞 데모 등을 벌였다.⁷¹

결국 증자는 불허되었고 가스요금 인하 및 미터기 요금 철폐는 미해결의 상태로 남았지만,⁷² 동맹으로서는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은 여성과 단체가 협력하여 기업과 정계를 향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참정권이 없으면서도 시정에 협력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불량우유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도쿄시의 먼지문제 등 생활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⁷³ 그 자체가 여성들의 정치적 자각으로 연결되거나 참정권 행사에 앞서 실제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참정권을 얻으면 여성의 힘은 얼마나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동맹의 운동가 스스로는 물론 일반 여성과 대중에게도—보다 구체적인 상상과 논의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⁷⁴

후사예와 동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일찍부터 영미에서의 여성참정권 획득에 관한 정보를 수입하여 학습했다는 사실은 앞서도 소개했던 바와 같지만, 동맹 발족 후에도 국제사회와의 교류, 혹은 해외 부선운동가들과의 연대를 지속했다. 1929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회 범태평양부인회의에 파견된 약 25여 명의 일본 측 참가자 중에는 후사예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귀국 후 국제연락부인위원회를 조직했고, 1930년 8월 제2회 대회(호놀룰루)에서는 “모든 태평양 제국 부인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심화시켜 평화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범태평양부인협회가 설립되었다. 1934년 8월 제3회 대회(호놀룰루), 1937년 7월 제4회 대회(캐나다 밴쿠버)에 파견된 일본 대표 중에도 후사예 혹은 동맹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⁷⁵ 이러한 움직임은 만주사변 이후 국제 사회에

71 児玉勝子, 『婦人参政権運動小史』, 178쪽. 이상의 활동에 더하여 가스요금공탁동맹을 결성하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요금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10월에 이르러 상공상(商工相)이 증자반대를 결정한 것 외에 가격한 요구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72 市川房枝, 「月間時事」(『婦選』 3-12, 1929. 12.), 『市川房枝集』 2, 59~60쪽.

73 「不良牛乳問題」, 『婦選』 1-6, 1927. 7.; 竹内茂代, 「東京市の塵埃問題」, 『婦選』 3-10, 1929. 10.

74 「『市政と婦人』座談会」, 『婦選』 4-6, 1930. 7.

75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亜戦争〉』, 182~186쪽.

서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여성들이 평화 실현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하자는 취지의 것이었지만, 앞서 생활운동과 같이 부선운동 기반 강화를 위한 영향력 확대, 나아가 부선에 도움이 될 지식과 네트워크의 확충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부선을 위해 국제적 시야를 유지하고 연대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간접적 방식만은 아니었다. 제1회 대회에 참가했던 후사에게 약 열흘의 대회를 마친 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 본토를 방문하여 약 4개월 동안 체류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시찰하기 위해서였다.⁷⁶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이 획득된 이후의 상황과 관련 행사를 지켜 본 후 본격적인 부선운동을 시작했던 후사에는, 동맹의 활동 중에도 꾸준히 해외 상황을 파악하고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국경을 넘어 부선실현을 위한 연대를 유지했던 것이다.

③ 제한선거권을 둘러싼 갈등과 장래의 낙관

앞서 살핀 것처럼, 동맹의 노력과 정당의 정략적 선택이 더해진 결과, 1930년 경에는 정우회와 민정당 모두 부선의 인정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일본이 모델로 삼고 있던 영미뿐 아니라 —일본보다 뒤떨어졌다고 여겨졌던—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조차 부선이 인정되거나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도 무시할 수 없었다.⁷⁷ 정부 차원에서 이미 영국의 여성참정권 부여에 관한 조사를 마쳤다는 점은 앞서 언급했던 바이기도 하다. 더구나 1930년 선거 직후 열린 제58특별의회에서 이미 한 번 여성 공민권안이 중의원을 통과했기에, 연말 제59의회가 열리기만 하면 —부선 3권 중 하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신부인협회 이래 약 10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 온 부선(공민권)의 실현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76 児玉勝子, 『婦人參政權運動小史』, 169~170쪽.

77 久布白落実, 「婦選獲得同盟の世界的進出」, 『婦選』 2-5, 1928. 7. 오치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지나(중국)가 이미 남녀평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 등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당시 중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의회 절대 다수를 확보하게 된 하마구치 내각과 민정당의 태도는 동맹의 기대를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앞서 모치즈키 내상에 실망했던 후사에 등은 새로운 아다치 겐조 내상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⁷⁸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부선을 지지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점진론’의 입장에 섰다.

저는 역시 동서 사상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점진주의를 취해서 일본의 양풍미속을 해치지 않게 하고, 부인도 지방의 자치문제 등에 참여시켜서 장래에 참정권을 주어도 무방하도록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교적 순리를 지킨다는 일종의 특징이 있고, 또한 순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수수한 면이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보수적인 사상도 강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참여 때문에 여러 사회 조직에 극단적인 변화 등을 일으키는 일 없이 소박하게 과거의 양풍미속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쪽(점진론)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⁷⁹

‘점진론’은 부선을 사실상 반대하는 ‘상조론’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아다치의 태도는 동맹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가 입안을 준비하고 있던 것은, 여성에게는 지자체 가운데 상위의 ‘부현’(府県)은 제외하고 하위의 ‘시정촌’(市町村)에 대해서만, 그것도 연령 등에서도 남자에 비해 차별적인 공민권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제한공민권안’(이하, 제한안)이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후사에는 “극단적인 제한안의 통과는 도리어 전

78 「政界夜話」, 『婦選』 4-8, 1930. 9. 동맹 주변에서는 아다치가 민정당의 선거혁명 관련 조사 항목에 부선을 포함시켰다든가, 진보적인 인물이라든가, 그의 부인이 현명한 ‘양처현모’로서 남편이 부선에 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반면 앞서 시기상조론으로 부선을 좌절시켰던 정우회의 모치즈키 전 내상에 대해서는, 그가 부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힐난하고 있기도 했다.

79 「第五十八議會と婦人公民權案(二): 貴族院に於ける婦人公民權についての論戰」, 『婦選』 4-6, 1930. 7. 괄호 안은 인용자.

체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리는 … 이에 반대하고 완전공민권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를 위해 1~2년 정도 늦어져도 된다.”⁸⁰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정부의 제한안이 “부인을 저능[아] 취급”하는 것이며, “야시장에서 꽃값을 한없이 깎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후사에는 중앙(참정권)과 지방(공민권)의 구분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여겼지만, 공민권마저 제한안으로 통과한다면 이를 다시 완전한 공민권안으로 개정하기는 난망할 것이라고, 여성참정권 획득 후 여성의 참정 연령 수정에 다시 10년의 세월이 걸린 영국의 사례를 들어 반대했다. 사실 후사에는 공민권이 인정된 후—초기에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시행착오와 혼란이 부선 반대자에게 구실을 주어, 최종 목표인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내심 염려하고 있었다.⁸¹

후사에 등은 당연히 부선 3권을 일거에 획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겼지만,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공민권으로 축소하는 것에 타협한 것이었고, 그로부터 중앙정치 참가를 위한 참정권 획득까지 다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만일 제한안을 수용한다면 완전공민권 획득까지 다시 10년이 필요할 것이기에, 결국 참정권(을 비롯한 부선 3권) 획득까지는 앞으로 총 20년 이상 더 필요해지는 셈이었다. 참정권 획득까지의 중간 과정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부선 반대의 빌미를 주어 참정권 획득이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었다. 동맹은 도저히 제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민권 실현이 가시화될 무렵, 즉 민정당에서 제한안을 제안하고 그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될 무렵부터 부선운동계의 분열 또

80 市川房枝, 「普選運動の近状を論ず」(『婦選』 4-6, 1930. 7.), 『市川房枝集』 2, 110~111쪽.

81 市川房枝, 「制限公民權案を排する」, 117~122쪽. 제한공민권의 개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하는지는 ‘31세’의 여자 선거연령을 남자와 같은 ‘21세’로 낮추기까지, 1918년에서 1928년까지 약 10년이 걸린 영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市川房枝, 「最近の英米婦人界」(『女性改造』 3-7~3-9, 1924. 7.~1924. 9.), 『市川房枝集』 1, 292쪽].

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동맹이 설립 당시부터 ‘대동단결’을 표방했다는 점은 거듭 언급한 바이지만, 특히 공민권 획득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30년 4월에는 각종 단체를 결집하여 제1회 전일본부선대회를 개최, 공민권 획득을 향한 여성들의 일치된 열망을 드러냈다.⁸² 의회를 향한 압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같은 해 5월, 부선에 미온적이었던 보수적인 여성들이 요시오카 야요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인동지회(이하, 동지회)를 조직했고, 6월에는 교풍회가 참정권협회 재건을 이유로 동맹의 총무이사였던 오치미를 교풍회로 복귀시키는 일이 있었다.⁸³ 동맹이 부선을 위해 ‘대동단결’한 조직이라는 의미는 희석되고, 종래의 참정권협회와 참정동맹, 동지회까지 4개의 단체가 부선을 내걸고 존재하는 형세가 되었다. 강경하게 제한안을 반대한 후사예와 달리 일부 운동가들 중에는 이를 수용하려는 타협적인 입장이 없지 않았고, 동지회는 아예 제한안 통과를 위해 움직이기까지 했다.⁸⁴

동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30년 말 제59의회에 정부와 민정당은 알려졌던 것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의 제한안을 제출했고,⁸⁵ 이는 민정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의원을 무난히 통과했다. 그런데 당시 의회에서 부선안의 처리를 놓고 전개된 장면은 여성들에게 정치, 혹은 정당 정치에 대한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전 야당일 때에는 위원회에서 여성 공

82 児玉勝子, 『婦人参政権運動小史』, 186~190쪽. 1930년 처음 개최된 전일본부선대회는 2·26사건으로 제엄령이 발포된 1936년을 제외하고 1937년 제7회 대회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83 스가하라의 이러한 움직임이 부선운동가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부의 작전이라고 추측하며, 그 증거로 부인동지회 창립대회에 아다치 내상 등이 참가한 것을 든다. 부선운동가들 중에서 온건세력을 분리시켜 체제 내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참정권협회가 협력에서 이탈한 것도 후사예가 무산부인 단체와 연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으로 본다(菅原和子, 『市川房枝と婦人参政権獲得運動』, 143~144쪽).

84 「政府の制限婦人公民法案に対し」, 『婦選』 4-6, 1930. 7.; 「制限公民権案をめぐるて」, 『婦選』 5-3, 1931. 3. 같은 무렵 ‘전국정촌장회’(全国町村長会) 총회에서 여성 공민권 부여가 시기상조라는 결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 부선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하려 했으나, 동지회는 여기에도 함께하지 않았다. 「全国町村長会への共同運動」, 『婦選』 4-9, 1930. 10.

85 제출된 공민권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첫째, 연령은 남자 20세(이전은 25세), 여자는 25세로 한다. 둘째, 주거 제한은 남녀 모두 1년(이전은 2년)으로 한다. 셋째, 범위는 여자만 [부현을 제외하고] 시정촌으로 한다. 넷째, 아내가 명예직에 당선될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制限公民権案をめぐるて」).

민권 부여를 주장했던 민정당의 의원이, 이제는 여당 의원이자 법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점진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여당일 때에는 ‘상조론’의 입장을 취했던 정우회가, 야당이 되자 남녀 구분 없는 완전공민권안(이하, 완전안)을 제출했다.⁸⁶ 일찍이 후사에게 비판한 것과 같이, 양당에게 부선이란 “정당 자신이 부인 혹은 국가를 위한 충심(衷心)에서 그 실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을 다투는 경쟁[의 대상]일 뿐”으로, “[부선이 실현될 경우] 부인의 투표를 반대당에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 한쪽이 손을 내밀면 다른 한쪽도 [마지못해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상태”⁸⁷가 전개되고 있던 셈이다.

입법의 실권을 쥔 두 정당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 막상 집권하면 종래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소극적이 되는 정치인들에게 실망할 여유도 없이, 후사에 등은 제한안의 귀족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했다. 상정된 제한안은 귀족원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5 대 3으로 가결되었는데 세명의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각각 상조론, [여성 공민권 부여] 절대 반대, 불완전공민권 반대(완전안 지지)라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된 제한안은 아다치 내상의 관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64 대 184로 부결되었다.⁸⁸

제한적이라고는 해도 처음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공식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였기에, 이러한 결과 앞에 후사에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제한안이 귀족원에서 부결된 것을 ‘작은 승리’라고 자위했다. 직후 열린 동맹의 제8회 총회에서는 ‘완전공민권 획득’을 제일의 목표로 두기로 결의했다.⁸⁹ 이제 부선 획득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분위기상 1931년 연말에 있을 제60의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약

86 児玉勝子, 『婦人参政権運動小史』, 203쪽. 정우회가 제출한 것은 앞서 제58특별의회에 제출되었던 것과 같은, ‘남녀 모두 25세’(당시 시행 중인 남자 25세와 여자도 같게 함), ‘주거 제한 1년’, ‘범위는 남녀 모두 제한 없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완전안이었다.

87 市川房枝, 「普選運動の近状を論ず」, 110~111쪽.

88 市川房枝, 「制限婦人公民権案の否決される迄」(『婦選』 5-4, 1931. 4.), 『市川房枝集』 2, 159~162쪽.

89 市川房枝, 「飽迄完全公民権獲得を期する」(『婦選』 5-5, 1931. 5.), 『市川房枝集』 2, 171쪽, 175쪽.

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의 태도에 실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민권 획득의 가능성이 역사상 가장 높아진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반대한 귀족원 의원 중 일부는 ‘제한안’이라서 반대한 것이었기에, ‘완전안’의 제출과 지속적인 설득이 — 이전 신부인협회 활동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 귀족원에서의 종래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하필 이처럼 부선에 대한 기대가 일본 역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던 순간인 1931년 9월, 만주에서 관동군에 의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만주사변의 발발이었다. 처음에는 그러한 소식이 “진짜 전쟁”의 우려를 낳기는 했지만, 당장 부선운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외무성과 대립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군부를 경계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군부의 독재정치를 막아 낼 것이라고, 부선이 필요한 새로운 근거를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이다. 후사에는 “부인이 정치에 참여하면 분명 군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라고, “우리의 부선은 부인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⁹⁰ 그는 아다치 내상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전년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기까지 했다.⁹¹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달성되지 못했다. 정기의회 시작을 앞둔 1931년 12월, 경제 위기에 이어 만주사변 발발 이후의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민정당 내각이 붕괴했다. 의회 회기를 앞두고 천황으로부터의 조각(組閣) 대명이 정우회의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에게 내려졌고, 동맹이 그토록 기다렸던 연말의 제60의회에서는 부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다. 부선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도 못했고, 만주사변 후의 군비 증액이 통과되자마자 의회 장악을 노리는 이누카이가 의회를 해산해 버렸기 때문이다.

90 市川房枝, 「×と○との対話」(『婦選』5-10), 『市川房枝集』2, 238~244쪽.

91 市川房枝, 「第六十議會と婦選案」(『婦選』5-12), 『市川房枝集』2, 265쪽.

그러나 급변하는 정계의 상황도 동맹의 부선 실현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후사에는 민정당의 제한안에 대항하여 완전안을 제출했던 정우회의 재집권을 환영했고, 이누카이가 부선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졌다. 다만 야당일 때의 약속을 집권 후에 파기하는 전례를 기억하여, 이번에는 정우회가 약속을 실행하도록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을 뿐이었다.⁹²

1932년 2월 총선거(3차 보선)에서는 — 대부분의 선거에서 그러하듯 — 여당인 정우회가 승리를, 그것도 304 대 147로 압승을 거두었다. 내각과 의회를 함께 장악한 강력한 정당의 출현, 그리고 그러한 여당뿐 아니라 그 수반인 이누카이 수상이 부선에 호의적이라는 점에서,⁹³ 후사예를 비롯한 동맹의 운동가들이 부선 실현에 대해 큰 기대를 품는 것은 당연했다. 만주사변의 발발 이후 전쟁 기운의 고조와 군부세력의 대두, 정치적 혼란과 정권의 교체 등이 이어졌지만 결코 부선의 기대가 꺾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오래지 않은 5월 15일, 일부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5·15 사건)를 일으켰다. 이누카이 수상은 살해되고 내각은 붕괴했으며, 이것으로 정당내각의 시대도 끝이 났다. 이제까지 의회와 정당, 혹은 정당내각을 상대로 부선운동을 전개해 왔던 후사예와 동맹으로서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근대 일본에서 여성운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여성참정권 운동, 이른바 ‘부선운동’의 역사를 이치카와 후사예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부선획득동맹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종래 부선운동 연

92 市川房枝, 「政友会内閣と婦選問題」(『婦選』6-1, 1932. 1.), 『市川房枝集』2, 287~288쪽.

93 市川房枝, 「政友会内閣と婦選問題」, 287~288쪽.

구가 주로 ‘전쟁협력’의 기원을 찾으려는 관심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 글은 부선운동의 흐름을 운동의 상대가 되는 당시 일본 정치체제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부선운동계의 전략 수정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 협력하여 여성참정권을 획득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학습한 것이 부선운동의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근대 일본의 부선운동은 아래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후사에 등은 영미를 비롯한 서양 각국에서 총력전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에 협력한 대가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부선운동의 결과를 사실상 ‘예지’한 것은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선운동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정우회와 민정당이라는 정당과 그들에 의한 정당내각이었지만, 정권의 지속은 짧고 약속은 신뢰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당정치의 존립도 불투명했다. 셋째, 당시 일본은 서양식의 합리적 생활문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던 시기로, ‘생활’에 관한 중앙·지방 정부의 제안은 여성들이 거부하기 힘들거나 심지어 양자가 거부감 없이 연결되는 접점이 되기 쉬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선운동은 정당내각을 상대로 했던 출범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택했다. 첫째, 서양 사례에 대한 학습에 근거하여 —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했고, 둘째, 대(對)의회운동 즉 대(對)정당 중립주의에 입각한 입법운동(및 선거지원)을 펼쳤으며, 셋째, 부선의 근거로서 남녀평등과 같은 정당성보다 부선의 실현이 가져올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 이 또한 선행학습의 결과로서 — 부선 획득을 위해서뿐 아니라 실현 후의 미래까지를 염두에 둔 여성 정치교육에 힘을 기울였고, 다섯째,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주요 이슈인 생활·사회 문제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했으며, 여섯째, 부선을 위한 여성의 대동단결, 혹은 모든 여성을 아우르기 위한 부선을 지향했다.

그러나 이상의 전략이란 기본적으로 1924년 동맹의 설립 이래 1932년 5·15사건으로 정당내각이 붕괴하고 정당정치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정당 정치인이 아닌 군인이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민 양당이 장악한 의회조차 파시즘과 군부의 압력을 받는 시기가 되자, 동맹도 처음과 같은 방침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즉 정당정치가 와해된 이후, 특히 군부와 파시즘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정치가 총력전체제 혹은 대정익찬체제로 재편될 때, 부선운동의 전략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뀐 상대(counterpart)에 맞추어 부선운동의 방식을 수정한 결과, 이는 ‘전쟁협력’ 활동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